

의안 번호	1897	【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】 심 사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2. 1. 27.(목)
- 나. 제출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2. 1. 27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2. 2. 8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환경국장 한영필)

가. 제안이유

-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- 지원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)
-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대리수령 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지원자격 상실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8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주거기본법」 제3조 및 제15조
- 「저출산·고령화 기본법」 제8조 및 제10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하성천)

-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안임.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주거기본법」

[시행 2019. 4. 23.] [법률 제16391호, 2019. 4. 23., 일부개정]

제3조(주거정책의 기본원칙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, 2019. 4. 23.>

1. 소득수준·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
2.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·고령자·저소득층·신혼부부·청년층·지원대상아동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)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(이하 “주거지원필요계층”이라 한다)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
3.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,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
4.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
5.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
6. 주거환경 정비,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
7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8. 저출산·고령화,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·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
9.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

제15조(주거비 보조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「 저출산 · 고령화 기본법 」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· 출산 ·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· 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· 출산 ·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 · 출산 ·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 ·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·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